

정답

01	①	02	②	03	⑤	04	②	05	③
06	⑤	07	③	08	⑤	09	④	10	②
11	④	12	③	13	④	14	⑤	15	④
16	②	17	③	18	①	19	③	20	①
21	④	22	③	23	④	24	①	25	⑤

01

2024 행정사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 ②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 시키는 행위이다.
- ③ 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 ④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 ⑤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 교통정리 등이 있다.

해설

- ① (X), ③ (O)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기대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효과[ex 공장 가동으로 주변 주민들이 입는 피해(환경오염)]를 의미하며 시장실패의 원인입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다른 경제주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소생산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 ④ (O) 부정적 외부효과는 과다공급되기 쉬운 조세부과를 통해 적은 양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①

02

2024 행정사

행정이론과 추구하는 행정이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간관계론 - 사회적 능률성
- ③ 신공공관리론 - 효율성
- ⑤ 신행정론 - 사회적 형평성
- ② 행정행태론 - 효과성
- ④ 과학적 관리론 - 기계적 능률성

해설

- ④ (X) 행정행태론 - 의사결정의 합리성 강조(정책 효과성 X)

정답 ②

03

2024 행정사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준	전통적 행정	신공공관리
ㄱ	정부역할	노릇기	방향잡기
ㄴ	서비스공급	독점적 공급	경쟁 도입
ㄷ	행정가치	관료 중심	고객 중심
ㄹ	행정주체	집권적 계층제	참여와 팀워크
ㅁ	관리방식	업무 중심	규칙 중심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ㅁ

해설

- ⑤ (X) 법령, 규칙 중심의 관리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의 행정관리 기제이고, 임무 중심 관리는 신공공관리의 관리 기제입니다.

정답 ⑤

04

2024 행정사

시민이나 의원이 집행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시키는 예산제도는?

- ① 일몰 예산제도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 ③ 영기준 예산제도
- ④ 계획 예산제도
- ⑤ 자본 예산제도

해설

단위원가 × 필요사업량 = 예산액 방식으로 계산하여 예산배정을 하여 투입(원가와 양)과 산출(사업과 활동)을 연결하는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입니다.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일반 국민이 정부사업을 이해하기 용이합니다.

정답 ②

06

2024 행정사

「공직자윤리법」에서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주식백지신탁
- ② 이해충돌 방지 의무
- ③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⑤ 내부고발

해설

- ① (O)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 ② (O)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 ③ (O)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0조
- ④ (O)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⑤ (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정답 ⑤

05

2024 행정사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계층제를 통한 통제
- ㄴ. 감사원을 통한 통제
- ㄷ. 시민과 언론을 통한 통제
- ㄹ.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
- ㅁ.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해설

ㄱ. 계층제를 통한 통제, ㄴ. 감사원을 통한 통제, ㅁ.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 → 공식 · 내부통제
 ㄷ. 시민과 언론을 통한 통제 → 비공식 · 외부통제
 ㄹ.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 →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 비공식 · 내부통제

정답 ③

07

2024 행정사

예산 집행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용(移用)이란 세항·목 등 행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 ② 전용(轉用)이란 장·관·항 등 입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 ③ 이체(移替)란 폐지되거나 기능이 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된 기관의 예산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 ④ 명시이월(明示移越)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⑤ 사고이월(事故移越)이란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해설

- ① (X) 세항·목 등 행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 → 전용
- ② (X) 장·관·항 등 입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 → 이용
- ③ (O)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④ (X)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⑤ (X)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③

08

2024 행정사

다음 예산의 원칙과 예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의결의 원칙- 준예산
- ② 한정성의 원칙- 사고이월
- ③ 통일의 원칙- 교육세
- ④ 단일의 원칙- 특별회계
- ⑤ 예산총계주의 원칙- 기금

해설

- ① (O) 준사전에
- ② (O) 이전/예추/월계부
- ③ (O) 통일성의 원칙 예외로 목적세가 있으며, 교육세는 목적세 중 하나입니다.
- ④ (O) 특단통
- ⑤ (X) 기금의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견해도 있고 보지 않는 견해도 있습니다. i) 중앙정부 예산규모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계를 뜻한다면 그것은 기금 등을 제외한 것이므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신무섭, 주상현 저 '재무행정학'). ii)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전까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으로 본다면 완전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5번을 정답으로 한 것으로 보이나, 「지방재정법」상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⑤

09

2024 행정사

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에 이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 ② 자치경찰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가 있다.
- ③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
- ⑤ 국가경찰사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이다.

해설

- ① (O)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
- ②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③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④ (X)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⑤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답 ④

10

2024 행정사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② 국가보훈처
- ③ 여성가족부
- ④ 재외동포청
- ⑤ 질병관리청

해설

- ② (X) 2023년 6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되었습니다(「정부조직법」 개정).

정답 ②

11

2024 행정사

다음 중앙행정조직위원회 중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회는?

- ① 공정거래위원회
- ② 국민권익위원회
- ③ 금융위원회
- ④ 방송통신위원회
-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설

- ④ (X)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나머지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답 ④

12

2024 행정사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인사기관은 각 행정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의 공직규범기준 등 제공 기능을 담당한다.
- ② 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다수 위원들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③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제 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 ④ 우리나라에서 인사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인사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이 있다.
- 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이다.

해설

- ① (O) 중앙인사기관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③ (X) 1999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설치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는 비독립합의형 중앙인사기관입니다. 따라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제 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④ (O) 행정부의 인사기관에는 중앙인사기관, 부처 인사기관,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 등이 있습니다.

정답 ③

13

2024 행정사

공급의 담당주체와 수단의 결합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		공급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급 수단	권력	(가)	(나)
	시장	(다)	(라)

- ① 가: 일반행정, 나: 책임경영, 다: 민간위탁, 라: 민간기업
- ② 가: 책임경영, 나: 일반행정, 다: 민간기업, 라: 민간위탁
- ③ 가: 민간기업, 나: 민간위탁, 다: 책임경영, 라: 일반행정
- ④ 가: 일반행정, 나: 민간위탁, 다: 책임경영, 라: 민간기업
- ⑤ 가: 책임경영, 나: 민간위탁, 다: 일반행정, 라: 민간기업

해설

- (가) 공급 수단: 권력, 공급주체: 공공부문 → 일반행정(정부의 기본 업무, 법령상 규정 업무)
- (나) 공급 수단: 권력, 공급주체: 민간부문 → 민간위탁
- (다) 공급 수단: 시장, 공급주체: 공공부문 → 책임경영(공적 책임이 강한 경우)
- (라) 공급 수단: 시장, 공급주체: 민간부문 → 민간기업(시장 탄력적 공급)

정답 ④

14

2024 행정사

현대조직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간행태의 발전과 쇠신적 가치관을 중시하며 인간을 자아실현인 · 복잡인으로 파악한다.
- ② 가치의 다원화 및 행정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 ③ 효과성 · 생산성 · 민주성 · 대응성 · 사회적 적실성과 종합적인 행정개혁을 중시한다.
- ④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태적 · 유기체적 개방체제로 파악한다.
- ⑤ 조직발전을 위해 조직의 변동과 갈등을 전적으로 억제한다.

해설

- ①, ② (O) 현대조직이론에서는 인간이 거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변성을 지닌 복잡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조직을 복잡한 체제로 보기 때문에 획일화나 법칙화를 피하려 합니다. 인간을 자아실현인 · 복잡인으로 파악하며, 현대조직이론의 가치 기준은 다원화되어 있으며 연구대상으로 선정되는 문제들은 크게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 ③, ④ (O) 현대조직이론은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태적 · 유기체적 · 개방체제로 파악하며, 효과성 · 생산성 · 민주성 · 대응성 · 사회적 적실성과 종합적인 행정개혁을 중시합니다.
- ⑤ (X) 조직에서 변동 · 갈등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조직발전을 중시합니다.

정답 ⑤

15

2024 행정사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②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 ③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대표적인 경력직 공무원이다.
- ④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신분이 보장된다.
- ⑤ 기술직과 연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 ① (X) 경력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② (X)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정무직(특수경력직)
- ③ (X)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입니다.
- ④ (O)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 ⑤ (X) 기술직과 연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 → 일반직(경력직)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정답 ④

16

2024 행정사

공공서비스 생산방식 중 이용권(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 ② 시민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는 각종 돌봄서비스에서 전자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 ④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 ⑤ 노인, 장애인, 보육 정책 등에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해설

- ② (X) 바우처는 소비자가 공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이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비용을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 X).
- ③ (O)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전자 바우처를 도입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전자 바우처로 운영 중입니다.
- ④, ⑤ (O)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면서 노인, 장애인, 그리고 보육정책 등에서 이용권 방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답 ②

17

2024 행정사

「국가공무원법」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 임용방법은?

- ① 파견
- ② 전보
- ③ 전입
- ④ 전직
- ⑤ 겸임

해설

- ① (X)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 ② (X) 「국가공무원법」 제5조
- ③ (O) 전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④ (X) 「국가공무원법」 제5조
- ⑤ (X)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8조의2(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 자격 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시험과목이 같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③

18

2024 행정사

우리나라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이 직접 증명하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정부이다.
- ② 부처 간 장벽이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연계·통합이 가능한 정부이다.
- ③ 모바일 기기 등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 ④ 국민의 수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 ⑤ 참여·소통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해설

- ① (X) 스마트 전자정부란 진화된 IT기술과 정부 서비스간 융·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국민이 원하는 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민의 참여·소통으로 진화(進化)하는 선진화된 정부를 의미합니다(출처: 행정안전부). 스마트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 X).

정답 ①

19

2024 행정사

지방자치제도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세종특별자치시
- ② 경상북도 고령군
- ③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 ⑤ 전라남도 순천시

해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정답 ③

20

2024 행정사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② 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권한을 이양받은 자치권을 고유권이라고 한다.
- ③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 ④ 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이므로 전래권이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국방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② (X) 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권한을 이양받은 자치권 → 전래권
- ③ (X)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 ④ (X) 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 → 고유권
- ⑤ (X) 국방·외교는 국가사무입니다.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정답 ①

21

2024 행정사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만족모형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적의 대안이 아닌 만족하는 정도의 대안을 결정한다.
- ② 최적모형은 비정형적인 정책결정 시 창의성이나 통찰력 같은 초합리성을 중요시 한다.
- ③ 쓰레기통모형은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하에서의 정책결정양태를 설명한다.
- ④ 관료정치모형은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이 연합하여 최종해결안을 선택하고, 토론과 협상을 매우 중요시 한다.
- ⑤ 점증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약간의 향상을 위해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해설

- ④ (X) 엘리스 모형 중 관료정치모형은 상이한 목표와 정보 및 자원을 가지고 (의견이 동일한 X)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들의 정치적인 타협과 흥정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정답 ④

22

2024 행정사

정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르크스주의 - 현대국가는 모든 자본가 계층의 공통된 이해 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위원회와 같다.
- ② 엘리트주의 - 지배계층은 모든 정책과정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의 혜택을 누린다.
- ③ 무의사결정 - 정치적 행위자는 자신의 효용과 만족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 ④ 제도주의 - 정책분석의 초점은 정부제도의 공식적·법적 기구에 맞추는 것이다.
- ⑤ 다원주의 - 정부의 역할은 단지 집단 간의 이익대결과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제3자에 불과하다.

해설

- ① (O) Marx는 경제관계가 정치, 문화 등의 모든 사회관계를 지배한다는 논리에 따라,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가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장악한다고 봅니다.
- ③ (X) 무의사결정은 엘리트 계층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전략입니다.
- ④ (O) 제도론적 접근은 법이나 제도를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이것을 통해 현상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입장입니다.

정답 ③

23

2024 행정사

주민소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들이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제도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의 형태이다.
- ② 지역의 주요 안건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 ③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소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 ④ 주민이 감사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 ⑤ 주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 의원 권한의 일부를 제약하거나 행사한다.

해설

- ①, ③ (X) 주민소환에 관한 설명입니다.
- ②, ⑤ (X)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입니다.
- ④ (O)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①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④

24

2024 행정사

우리나라는 도·농 통합이나 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합을 전개해왔는데, 가장 최근에 통합한 도시는?

- ① 청주시 + 청원군 = 청주시
- ② 창원시 + 마산시 + 진해시 = 창원시
- ③ 여주시 + 여천시 + 여천군 = 여주시
- ④ 춘천시 + 춘천군 = 춘천시
- ⑤ 천안시 + 천안군 = 천안시

해설

- ① 청주시 + 청원군 = 청주시: 2013년(「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② 창원시 + 마산시 + 진해시 = 창원시: 2010년(「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③ 여주시 + 여천시 + 여천군 = 여주시: 1998년(「전라남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④ 춘천시 + 춘천군 = 춘천시: 1995년(「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 ⑤ 천안시 + 천안군 = 천안시: 1995년(「경기도 평택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정답 ①

25

2024 행정사

관리과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이 내포하는 목적가치를 중요시 한다.
- ② 자원과 비용의 사회적 배분을 고려한다.
- ③ 질적 분석을 중요시 한다.
- ④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다.
- ⑤ 계량적 분석에 입각하여 처방을 제시한다.

해설

- ①, ②, ③, ④ (X) (협의의) 정책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⑤ (O) 관리과학이란 의사결정에 최적대안을 탐색하는데 활용되는 계량적 분석기법입니다. 양적분석을 강조하고, 수량측면에 초점을 둡니다(수리적 모형 구성과 계량적 분석을 중요시함)

정답 ⑤